

청년 워킹 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

2010.8.3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
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
4. 글을 마치며



<http://saesayon.org>

요약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쉼터족이나 니트족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크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에 만연한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원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수입 자체를 잃게 된다. 이는 그 가계로 하여금 빈곤의 가능성과 함께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으며,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자리를 가진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청년 워킹 푸어일 수 있는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또한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가 워킹 푸어로 설정한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구분했을 때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는 200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내 저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없애면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청년층에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가 아닌,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기업이 참여해 청년층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함께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라 생각된다. 특히,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문

1. 들어가는 글 :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빈곤인구를 워킹 푸어와 장애,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해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전통적 빈곤으로 구분하면, 전체 빈곤인구에서 워킹 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4%로 전통적 빈곤인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워킹 푸어의 부각으로 인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장애인이나 노동,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 빈곤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여전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5세 이상 2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우 고용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청년층의 비율 저하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중 상승은 청년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 캥거루족²⁾이나 니트(NEET)족³⁾으로 머무는 등의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1) “김수현 (2010)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참조

2) 캥거루족 :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연령대에서 주로 결정하는 문제인 결혼이나 출산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다른 연령층에서의 워킹 푸어 증가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

청년 워킹 푸어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원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수입 자체를 잃게 된다. 이는 그 가계로 하여금 빈곤의 가능성과 함께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이다. 일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은 임금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다면 워킹 푸어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 일자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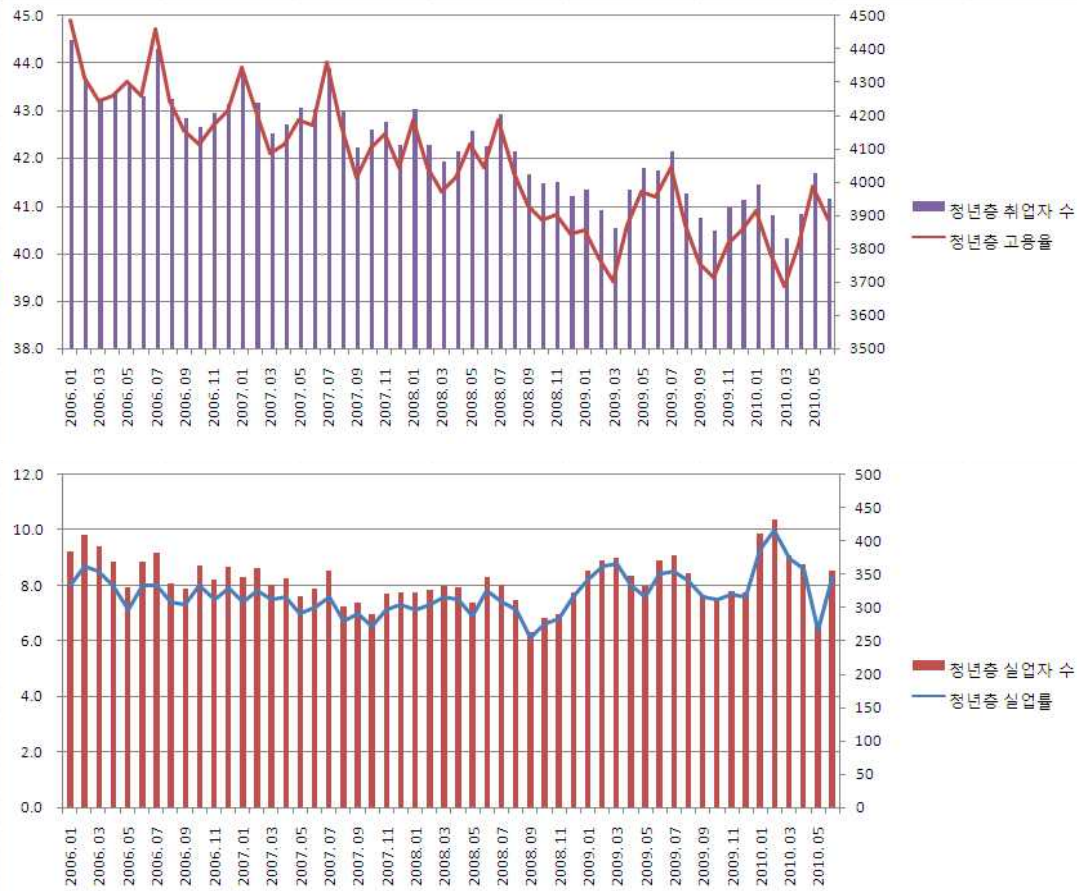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는 우리나라보다 워킹 푸어 문제가 빨리 부각되었던 일본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은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할 시기의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청년층은 근로소득이 없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머물러야 하고, 이로 인해 그가 속한 가계는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청년 워킹 푸어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자수, 고용율, 실업자수,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연도 동월자료를 비교해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의 취업자 수 및 고용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율을 전체 고용율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수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회복도 더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3) 니트족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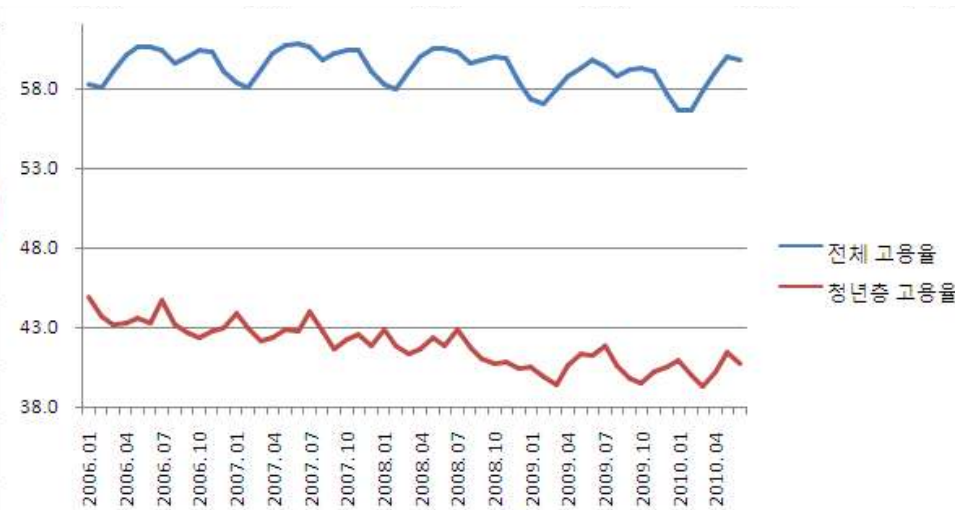
[그림 1] 청년층 취업자수, 고용율, 실업자수, 실업률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 고용율과 실업률의 단위는 %이고 왼쪽 축에 수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단위는 천명으로 오른쪽 축에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2] 전체 고용율과 청년층 고용율의 변화



참조). 이와 같은 불황기 청년층에 대한 고용감소는 과거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관찰된 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즉시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기업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고용율의 상대적으로 큰 감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워킹 푸어 증가 가능성이 중장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림 1]을 보면 고용율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의 변화(증가)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측되는 것으로 마찰적 실업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연령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고용된 사람은 줄어들지만, 실업상태인 사람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당수의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의 소득에 의존하는 캔거루족이나 니트족이 증가했거나, 일자리를 구한 후 졸업하기 위해 학교를 더 오랫동안 다니는 선택을 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가리킨다.

■ 저임금 일자리

일 자리를 가진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청년 워킹 푸어일 수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또한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저임금 자체를 워킹 푸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빈곤상태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부자인 가구의 대학생이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경우도 워킹 푸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⁴⁾.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자리 측면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일자리에서 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일자리와 비교해 청년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이런 일자리의 존재가 일을 해도 빈곤상태에 머무는 워킹 푸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과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해 임금근로자 중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 비율 및 노동자 수, 중장년층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각 연도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이 후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의 비

4) 그러므로 노대명(2005)은 저임금 노동자와 워킹 푸어, 근로빈곤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과 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 후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 노동자 중 청년 워킹 푸어일, 또는 청년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그림 3]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 비율 및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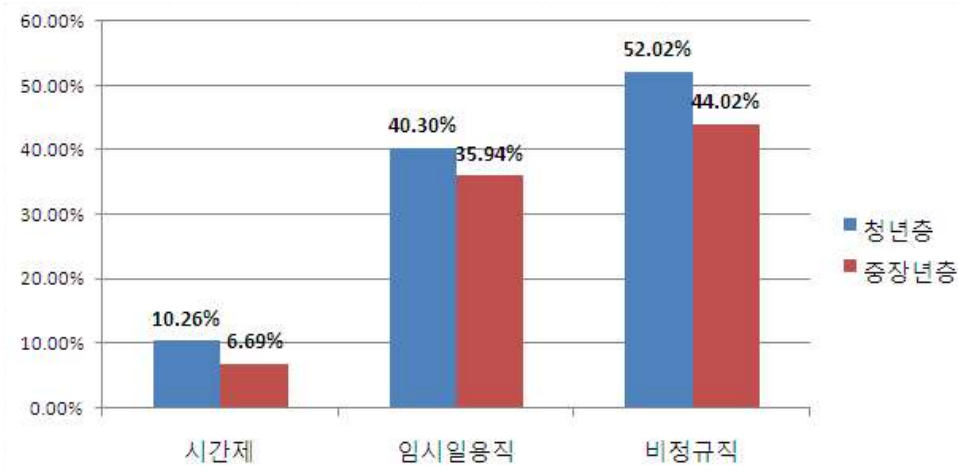


※ 청년층 저임금 비율과 중장년층 저임금 비율은 %단위로 왼쪽 축 수치 참조,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 수는 천명 단위로 오른쪽 축 참조

그림에서 중장년층 역시 2008년 이 후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청년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워킹 푸어보다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중장년층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높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일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청년층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비율



일자리 형태의 차이 외의 이유로도 임금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노동시장 참여기간이 더 짧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에 종사한 기간도 더 짧을 것이다. 연공서열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임금격차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층 임금노동자 중 연공서열제가 적용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는 고려해 볼 문제이다. 차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시간제를 통제해도 청년층이라는 연령대는 저임금 노동자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비정규직 내, 임시일용직 내에서 청년층이란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

앞서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이나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이 청년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워킹 푸어, 빈곤의 증가라는 문제와 함께 경제활동참여 인구의 감소라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일자리가 없을 경우 혹은 낮은 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청년층은 부모의 소득에 의지하거나, 다른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등 경제활동참여를 포기할 확률이 다른 연

령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캥거루족의 증가나 니트족의 증가란 말로 표현되던 이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또한 주로 이 연령대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청년 워킹 푸어란 현실은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참여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청년 워킹 푸어 증가배경을 토대로 하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 워킹 푸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청년고용할당제

청년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통해 얻는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그것이며, 이는 청년고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인턴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고용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는 청년인턴제의 성과로, 작년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청년 인력들 중 91%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⁵⁾. 하지만 대상이 된 인원은 2,450명에 불과하며, 참여기업들은 대부분 50인 이하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대책으로서의 큰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율이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일자리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작은 성공이 있었지만, 실제 더 많은 고용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 3%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⁶⁾, 채용하더라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지난 7월 15일 노동부의 발표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청년층 고용자 수를 늘리려 성과를

5) 연합뉴스, 中企 청년 인턴 대부분, 정규직 전환, 2010년 7월 29일

6) 지난 7월 15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의 40%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권고하고 있는 정원 대비 3% 청년채용 기준에 미달했으며, 청년층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17%나 되었다.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에 고용실적으로 잡히지 않던 1년 이상 계약직도 채용실적에 포함시켰다. 이런 정부의 방식은 청년고용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올 것이고, 청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Rossetta Plan)과 같은 청년 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로제타 플랜은 벨기에의 청년실업대책으로 1998년 당시 신규졸업자의 절반가까이가 실업상태에 이를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자 당시 벨기에의 노동부 장관이 25명 이상 기업에 1년 동안 1명 이상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이 후 2000년에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3%의 청년을 의무고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벨기에는 이를 통해 시행 첫해에만 5만명 이상의 청년층이 신규로 고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청년고용할당제의 실행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원을 주는 대신, 청년고용 3%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정부부터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들에게 3%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실제 대기업들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촉진시키는 투자를 약속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을 이유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3% 이상 청년층 고용 책임 부과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0년 3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수는 387만 5천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3%만큼 청년층 고용을 하면 약 12만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층 실업인구가 38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수의 청년층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있는 많은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청년 워킹 푸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과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계약직 형태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정규직 고용 증가를 위해 정규직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안정세를 부과해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기업에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보다 낮은 혹은 최저임금제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청년층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 새로운 적극적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

정부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함께 새로운 고용촉진정책의 추진을 통해 청년층 고용확대 및 청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학교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정책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을 교육훈련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데 정부, 기업,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취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또한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떠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손을 놓고 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그 역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독일과 같이 청년층의 교육훈련에 있어 학교,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업에 적합한 숙련을 익힌다면 청년층을 고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훈련에 대한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그와 같은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을 고용하던 기업에 청년층 고용을 증대시킬 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고용연계시스템을 만들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또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임금의 9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제공받는 대신 실업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교육훈련, 취업 프로그램 참여와 연계시킨 방안은 덴마크 외에도 몇몇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데, 이와 같이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 워킹 푸어를 위한 정부지원 및 사회보장체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빈곤 상태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역시 실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자리 제공이 근본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원칙론적인 말을 하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고 있다. 그 속에서 더 많은 워킹 푸어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사회보장체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소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계산해보면, 워킹 푸어 가구는 평균 가처분 소득이 71만 4천원인데 반해, 평균 지출은 12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나 보건비를 다른 가구의 절반정도만 쓰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⁷⁾. 대출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 워킹 푸어 역시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28일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10명을 대상으로 5월 한달간의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으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비나 보건비, 문화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빈곤상태를 벗어날 가능성도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이들을 워킹 푸어에서 탈출시켜야 할 것

7) 소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현 (2010)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참조

이지만, 현 상황에서 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⁸⁾, 이에 대한 정부의 보장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해서는 실업부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앞서 말한 교육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임금 역시 줄어들었다. 이는 청년 워킹 푸어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워킹 푸어, 빈곤 인구 자체가 증가한다는 측면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 증가의 원인은 크게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아닌,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기업이 참여해 청년층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함께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김수현 (2010)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참조

청년 워킹 푸어 문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학교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 (2010)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 카도쿠라 다카시 (2008) 워킹 푸어.
- 현대경제연구소 (2010) 사전적 워킹 푸어 대책 시급하다, 경제주평.